

자료번호	A1-2011-0207
자 료 명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8차)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전문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직자 비리, 부패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탁이나 알선 등의 행위가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알선·청탁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들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안의 명칭이나 중복 법안과의 충돌 등의 문제와 현재 공직 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제정될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각 항목별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선택형 질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센터장 이민호
초청연구위원 강주희

조사담당자: 연구원 김보은 (tel: 02-567-2286)
연구원 장경원 (tel: 02-567-2259)
e-mail: research@kipa.re.kr
fax: 02-567-2221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사회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1. 귀하는 우리 사회 공직자의 부패(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행위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심각하지 않음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

2. 귀하는 어떤 기관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등)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국회 ② 법원 ③ 헌법재판소
④ 중앙선관위 ⑤ 감사원 ⑥ 각급 행정기관
⑦ 지방자치단체 ⑧ 지방의회 ⑨ 공직유관단체
⑩ 기타()

2-1. 위의 문항과 관련해, 왜 특별히 그 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부분에서 공직자의 부패(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등)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채용, 승진 등 인사부분 ② 예산의 집행
③ 특정 업무추진 과정 ④ 계약 및 수주 과정
⑤ 각종 민원의 해결과정 ⑥ 일상적인 부분
⑦ 기타()

4.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 부패(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등)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uad)$$

- ① 공직자의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 ② 부패를 종래의 관행으로 인정하는 문화
- ③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 ④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의 법·제도
- ⑤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 ⑥ 기타 ()

※ 다음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5. 우리 사회의 공직자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으로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탁관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uad)$$

- ① 매우 필요함 (☞5-1) ② 필요함 (☞5-1)
- ③ 필요 없음 (☞5-2) ④ 전혀 필요 없음 (☞5-2) ⑤ 모르겠음/의견없음

5-1.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앞으로 제정될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효과가 없을 것
 ② 별로 효과가 없을 것
 ③ 보통
 ④ 다소 효과가 있을 것
 ⑤ 매우 효과가 있을 것

7. 귀하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주요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항목들과 관련해 “새로운 법안의 정책적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법률 적용 범위의 확대					
	* 모든 공공기관 *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 공직자의 가족, 친족				
2)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금품, 향응 제한 * 공직자 상호간에 제공되는 금품, 향응 제한 * 기부금, 후원금 수수 제한	* 가족에게 제공되는 금품, 향응 제한 *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 제한				
3)	공직의 사적사용 방지(이해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제한 * 고용휴직, 민간파견 공직의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 공공기관의 예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 사용금지	* 공직자의 가족채용, 가족에 대한 조달계약 제한 * 공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4)	청탁금지					
	* 공직자의 직무·이권·인사·채용 청탁금지 *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무관련자의 공직자에 대한 채용 제의 금지				
5)	금지행위 처리절차					
	* 금지된 금품 등은 신고, 기부 또는 폐기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기피·회피 및 공개	*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신고 * 고위공직자 등의 이해관계 사전등록				
6)	무효·환수 조치					
	* 위반행위 적발 시 처분·계약 등의 중지 * 무효로 확정된 사안, 사적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7)	벌칙					
	* 금지 금품 등 수령 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직무청탁 시 형벌부과 * 사례금 기준을 초과하여 수령 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를 준수한 경우 형사 처벌 등 면책				

7-1. 위에서 평가한 항목과 그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위에서 평가한 항목과 그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내용 중에서 기존 부패방지법 등과 차별성이 있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법률 적용의 대상의 확대
- ②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 제한
- ③ 공직의 사적사용 방지(이해충돌 방지)
- ④ 부정한 청탁 및 위법·부당한 지시금지
- ⑤ 금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⑥ 무효·환수·벌칙 조치

8-1. 위의 문항과 관련해, 항목의 어떤 부분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함
1) 법안의 명칭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함					
2) 기존 공직자윤리법 등과의 중복규제					
3) 이해관계의 과다한 규제에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음					
4) 공직자의 가족채용 등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5) 민간인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문 인력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음					
6) 4촌 이상의 친족이나 제3자에 의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함					
7) 처벌 위주의 법적 대응의 한계					

9-1. 위의 문항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 이외에 법안의 제정 내용이나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직자 윤리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10.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윤리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별로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노력함

⑤ 매우 노력함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제도들의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공무원 행동강령					
2) 공직자 윤리법					
5) 국가공무원법					
4) 국가권익위원회					
5) 형법					

1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바로 청탁사실을 온라인 상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탁 관련 요주 인물을 파악하고, 소속 기관 내 청탁 취약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 “청탁 등록시스템”이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효과일 것임 (☞13-1)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임 (☞13-1)
 ③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임 (☞13-2) ④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임 (☞13-2)
 ⑤ 모르겠음/의견 없음

12-1. “청탁 등록시스템”이 정책적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 “청탁 등록시스템”이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윤리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나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연구원 규정상 사례비 지급을 위해 부득이 여쭙어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소속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례비 지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명	
소속 및 직위	소속: 직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본인)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